

코로나 재확산, 고용위기는 어디서 얼마나?

- '20년 3~7월 고용 변화를 통해 본 8월 이후 고용위기 쟁점

2020. 8. 24

한지원 연구원

jwhan77@gmail.com

〈요약〉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다시 한번 고용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에 올해 초 고용위기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분석해 코로나 2차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양상과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함.

- ▶ 3~7월 잃어버린 잠재적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340만 명·월.
- ▶ (고용위기 격차) 3~7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70만, 5~300인 미만 104만, 300인 이상 0 명·월의 취업자 상실. 기업규모에 따른 고용위기 격차가 분명하게 나타남. 3~6월 상용직 노동자는 공공부문에서 36만 명·월 증가, 민간부문에서 77만 명·월 감소. 민간과 공공의 고용위기 격차가 양극화 됨.
- ▶ (업종별 특징) 3~6월 서비스업에서 가동률(생산지수)이 10% 이상 하락한 업종의 취업자 수는 560만 명에 이르며, 직접적 실업 위험에 처한 취업자 수도 130만 명에 이룸. 6월 기준 취업자 숫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10개 제조업 업종은 대부분이 공단의 전통적 영세기업 밀집 업종이며, 그밖에는 수출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이 차지.
- ▶ (대책평가) 정부 고용 대책은 유동성공급, 내수지원, 고용지원 세 축으로 진행됐음. 어느 정도 시급한 위기를 해결한 성과도 있었지만, 자산시장거품, 포퓰리즘적 현금살포, 단기적 즉흥적 고용대책이란 한계가 있었음. 민주노총은 해고금지를 첫 번째 요구로 내걸었음. 하지만 코로나19 고용위기 업종과 기업의 특성이 해고금지 여부와 고용유지 여부가 같지 않다는 것. 해고금지는 그다지 타당한 요구가 아니었음.
- ▶ (2차확산 대책) 고용위기 업종과 기업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 상반기 대책의 부작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전이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재정 제약이란 조건 하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민주노총은 당위적 대책보다 고용위기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Alternative Worker's Movements

1. 취지

코로나19 2차 확산이 시작됐다. 8월 중순부터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서울 수도권에서 감염 경로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 조만간 3단계 거리두기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도 경험했듯,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킨다. 특히 고용의 피해가 극심한데,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막아도 경제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되는 산업과 직업에서는 고용 축소 압력이 지속해서 커지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2020년 3~7월의 고용 변화를 분석해 한국의 고용위기가 실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분석한다. 앞으로 닥칠 고용위기에 대처하려면, 정확히 어디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정부와 민주노총의 대응을 평가해 2차 확산과 거리두기 강화 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제안하고자 한다.

2. 고용위기 현황과 특징

1) 3월~7월 잃어버린 잠재적 취업자 수는 340만 명 · 월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수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추세선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0년1월~2020년2월을 대상으로 Hodrick-Prescott(HP) filter로 계산. 코로나 없었을 경우 추정치는 HP 추세의 2019년 평균증가율로 추정.

계절조정 수치로 확인했을 때, 2020년 3월 취업자 숫자는 2,684만2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만8천 명이 감소했고, 7월에도 취업자 숫자는 2,680만8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6만 5천 명이 감소했다. 작지 않은 숫자다. 하지만 이 숫자도 사실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데, 만

약,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취업자 숫자가 오히려 증가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작년과 단순하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늘었어야 할 취업자 숫자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속되는 고용위기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현시점의 취업자 감소분만이 아니라 3월 이후 감소분을 명·월 단위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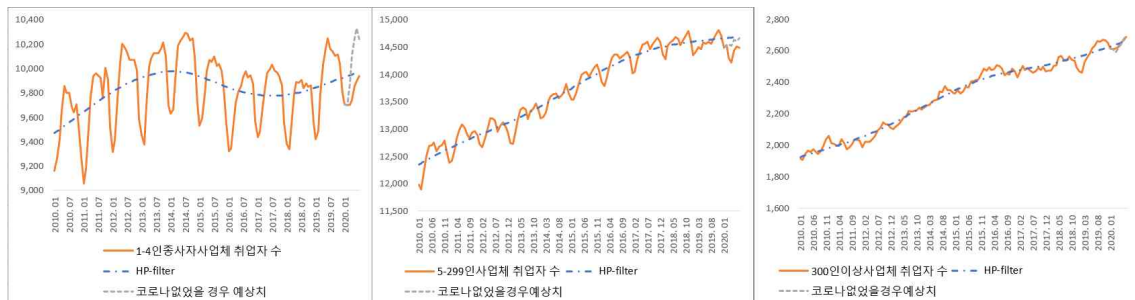
이전의 추이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7월 취업자 숫자는 코로나가 없었을 경우 약 2,743만7천 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잠정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인구가 실은 26만5천 명이 아니라 62만9천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취업자 숫자를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계산해보면 340만 명·월(월평균 68만 명)이다.

2) 코로나19 위기 이후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가 특징이다. 높은 수준의 고용안정과 상대적 고임금을 누리는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과 기업 내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적절한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나머지 취업자로 양분되어 있다. 이런 분절적이며 이중적인 노동시장은 경제침체 과정에서 도 격차를 키운다.

(1) (기업규모) 취업자 감소율 5인 미만 -3.4%, 5~299인 -1.4%, 300인 이상 0%

그림 3 > 사업체 규모별 잠정적 취업자 수 변화



	5인미만(천명)		5~300인미만(천명)		300인이상(천명)	
	실제	코로나 없었을 경우와차이	실제	코로나 없었을 경우와차이	실제	코로나 없었을 경우와차이
20년3월	9,698	-177	14,547	-249	2,613	21
4월	9,737	-377	14,515	-308	2,619	-1
5월	9,851	-403	14,637	-209	2,651	5
6월	9,891	-445	14,608	-107	2,664	-14
7월	9,934	-311	14,656	-171	2,687	-10
합계		-1,713		-1,044		1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추세선은 <그림1>그래프와 같음. 추정치는 추세선 코로나19 발발 전 1년 평균 증가율을 전년 동월 수치에 곱해 계산.

한국 노동시장 양극화의 대표적 분단선인 기업 규모별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자. (단, 통계청의 사업체 규모 별 취업자 수는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 원자료를 이용해 필자가 계절변동을 고려해 재계산했다.)

우선, 영세기업과 자영업 부분이라 할 5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 숫자를 보면 2020년 7월 99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 명이 감소했다. 그런데 이는 앞서 본 것처럼 현실과 괴리가 있는데, 지난 추이를 봤을 때 올해 마땅히 증가했어야 하는 수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추이를 고려해 코로나19가 없었을 경우 추정치와 올해 취업자 수를 비교해보면, 5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약 171만 명·월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월평균 34만 명이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중소기업으로 불리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3~7월 104만 명·월의 취업자 감소가 있었고,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에서는 취업자 증감이 없었다. 코로나19 없었을 경우의 추정치 대비 실제 취업자 감소율(5개월 평균)을 보면 5인 미만은 3.4%, 5~299인은 1.4%, 300인 이상은 0%이다. 취업자 감소는 자영업 영세기업 부분에서 가장 심각했고, 중소기업에서 그다음으로 심각했다. 대기업에서는 큰 영향은 없었다. 기업 규모에 반비례해서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셈이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효과가 코로나19 고용위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2) (민간과 공공) 상용직 증감, 민간 -77만, 공공 +36만 명·월

그림 4)민간/공공 상용직 노동자 변화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공공은 산업대분류의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교육서비스 중 3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숫자를 합한 것. 민간은 상용직 전체에서 앞의 공공을 빼준 것임.

경제침체로 인한 고용위기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공공부문과 다수가 불안정한 고용 관계에 있는 민간부문 사이에서도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민간과 공공을 나누어 취업자 숫자를 조사하는 통계가 1년 단위로만 나오는 관계로,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고용 통계로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살펴봤다.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공공 일자리의 약 80%는 산업대분류의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교육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조건을 이용해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교육서비스 30인 이상 사업체(30인 이하 교육서비스 사업체는 대부분이 학원이다.)의 상용직을 공공부문 상용직 노동자로 간주했다.

분석에 따르면 공공부문 상용직 노동자는 2020년 3~6월까지 4개월간 36만4천 명·월(월평균 9만1천 명)이 증가했고, 반대로 민간 상용직 노동자는 이 기간 77만2천 명·월(월평균 19만3천 명)이 감소했다. 이 기간 공공에서는 상용직 노동자의 약 6%가 증가한 셈이고, 민간에서는 2%가 감소한 셈이었다. 코로나19 이후 민간에서 고용위기 체감도가 매우 높은 것에 반해 공공부문에서는 그다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이 수치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서비스업) 잠재적 고용축소 압박 약 560만 명, 직접적 고용위기 약 130만 명.

그림 5) 고용위기가 심각한 서비스업종과 취업자 규모

	가동률	2018년				
		코로나 이후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특수고용
항공여객운송업	13%	30,524	224	-	-	30,748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14%	42,888	1,741	3,790	1,072	49,491
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34%	34,541	52,123	78,389	885	165,938
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	54%	78,704	20,800	75,478	1,701	176,683
스포츠서비스업	62%	74,346	25,674	43,812	31,404	175,236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 배급업및상영업	63%	31,101	10,378	2,256	2,213	45,948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63%	21,366	4,864	3,263	3,427	32,920
그외기타개인서비스업	77%	47,034	21,629	66,001	10,024	144,688
그외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8%	14,044	762	1,010	745	16,561
육상여객운송업	80%	249,596	7,925	161,548	9,304	428,373
기타상품전문소매업	80%	97,091	29,283	139,255	7,070	272,699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81%	55,400	27,967	184,498	15,730	283,595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81%	40,372	17,581	8,167	1,832	67,952
광고업	81%	46,207	4,189	7,691	1,511	59,598
주점및비알코올음료점업	81%	97,859	140,669	239,508	13,270	491,306
음식점업	82%	499,518	414,728	729,204	4,016	1,647,466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83%	150,850	13,360	8,532	10,664	183,406
건축자재도매업	84%	71,209	6,286	32,258	530	110,283
음·식료품소매업	85%	40,997	17,571	140,380	3,055	202,003
섬유, 의복, 신발및가족제품소매업	86%	87,063	46,985	167,455	874	302,377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86%	108,861	3,445	2,634	946	115,886
전문디자인업	87%	15,971	1,657	4,769	301	22,698
산업및전문가단체	89%	28,020	1,198	-	834	30,052
학원(고급학원, 기타교육기관)	80%	229,477	105,609	159,852	96,554	591,492
합계		2,193,039	976,648	2,259,750	217,962	5,647,399

※ 자료: 가동률은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를 이용해 2020년 1월 대비 3~6월 평균 생산지수(계절조정)로 계산. 단, 학원의 경우 지수가 조사되지 못하고 있는데, 엄청난 타격을 입은 점을 감안해 임의로 80% 정도로 추정. 취업자수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영업 숫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합계이며, 특수고용은 통계에서 '기타 고용'을 의미.

코로나19 이후 고용위기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산업은 민간 서비스업이다. 취업자 숫자가 다른 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영세한 기업이 많아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에 직접 타격을 입기도 했다. 2020년 7월 취업자 숫자는 서비스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35만 명이 감소했는데,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약 9만 명의 고용 증가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민간 서비스 부분에서는 약 44만 명이 감소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좀 더 세세한 업종별로 고용위기 상황을 보면 위 표와 같다. 위 표는 계절변동을 고려해 올해 1월 대비 3~6월 4개월 평균 생산지수가 10% 이상 감소한 업종을 정리한 것이다. 생산지수는 제조업의 가동률과 비슷한 개념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계절 영향으로 10% 내외 매출 변화가 항상 있는데, 따라서 계절변동을 제거하고도 10% 이상 생산이 감소했다는 것은 사업주가 인건비 감축 압력을 평소 이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동률(생산지수)이 50% 이상 감소한 심각한 경영위기 업종은 항공여객, 여행사, 유원지 등의 업종이다. 숙박, 스포츠, 영상, 예술 등의 업종도 가동률이 30% 이상 하락했다. 또한, 취업자 숫자가 많고 자영업, 특수고용 등 취약한 계층이 밀집해 있는 음식점, 미용, 소매업 등도 10~20% 가까이 가동률이 감소했다. 육상여객, 학원 등도 타격을 심하게 입은 업종이다. 이렇게 가동률이 10% 이상 하락한 업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숫자는 약 565만 명으로 민간 서비스업 취업자 1천9백만 명의 약 30%에 달한다. 물론 2018년의 취업자 숫자라 2020년 초 상황과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이 기간에 큰 경제적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현재 상황과 비슷하다고 이해해도 무방하겠다.

종사자 지위 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이 220만 명, 임시일용직이 100만 명, 자영업자가 230만 명, 특수고용이 20만 명 정도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일자리 상실(폐업)보다는 소득감소로 위기가 나타나는 상황이고, 임시일용직은 심각하게 일자리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상용직의 경우 아직 대량 정리해고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2차 파동으로 위기가 심화할 경우 정리해고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수고용의 경우 해고와 고용이 분명치 않은 특수성 탓에 소득 감소 상태로 위기를 견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가동률에 비례해 그대로 고용이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130만 명의 취업자가 직접적 일자리 상실 위기에 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제조업: 공단의 전통적 영세기업에서 해고 확대

코로나19 경제침체로 제조업에서도 고용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제조업 취업자는 코로나 19 위기 이전부터 감소했던 것이기는 했다. 2016년부터 2020년 2/4분기까지 두 분기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이런 제조업 고용위기가 더 가속했다고 봐야 한다.

그림 6) 제조업 상용직 감소 상위 10개 업종

산업분류	규모	2020년6월 상용직숫자	전년동월대비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0~299인	145,198	-8,74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30인미만	50,275	-5,98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30인미만	66,261	-5,588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30~299인	34,488	-5,482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30~299인	111,629	-5,187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기구제외	30인미만	254,349	-4,566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0~299인	168,228	-4,154
식품제조업	30~299인	108,956	-4,001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30인미만	124,137	-3,931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0인미만	214,781	-3,783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위 표는 2020년 6월의 전년 동월 대비 상용직 숫자가 많이 감소한 10개 업종이다. 특징은 3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서 상용직 숫자 감소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의복, 섬유, 금속가공, 플라스틱, 기타기계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제조업 공단에서 영세기업들이 담당하는 전통적 업종들이다.

30~299인 중소기업의 경우 자동차부품사가 가장 많이 상용직이 감소했고, 그 뒤를 섬유, 플라스틱, 기계, 식품, 등이 뒤따랐다. 수출감소로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고용보호 대책의 성과와 한계

1) 정부: 종합적 장기 대책보다는 즉흥적 단기 대책 중심

정부의 고용 대책에는 유동성공급, 내수지원, 고용지원이 맞물려 있다. 유동성공급은 신용경색으로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에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무제한에 가까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내수지원은 소비급감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곤란을 완화해보자는 취지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은 서비스업에 고용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데, 서비스업의 경영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 못하면 고용위기를 피하기 어렵다. 고용지원은 기업들이 매출과 이윤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 실업증가-내수침체-위기심화라는 경제위기의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다.

한국은행은 통화스왑을 통한 외환대출, 증권사 RP매입, 회사채·CP매입기구 설립, 민간은행

대출한도 확대 등을 통해 올해 7월 말까지 약 70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¹⁾ 중앙정부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35조 원과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을 대출 및 대출보증, 그리고 출자 등으로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코로나19 발발 이후 공급하는 유동성이 250조 원에 달한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이러한 유동성 공급 정책은 신용경색을 막고, 기업이 존속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는 하다. 중소기업 대출은 1~7월 중 전년보다 29조 원이 증가했고,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이 이 기간 31조 원이 증가했다. 이는 2019년 1년간 대출 증가액 중소기업 23조 원, 개인사업자 24조 원보다 각각 26%, 29% 증가한 액수다.²⁾ 다만, 유동성 공급의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에서 투기자금으로도 이용되고 있어 부작용 역시 상당히 큰 실정이다.

내수지원의 경우 1차 추경에서 약 3.5조 원 규모 긴급재난지원금(소비쿠폰)을, 2차 추경에서 14조 원에 달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을 지급했다. 특히 2차 추경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논란이 컸는데,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닌지, 부자들에게도 정부가 소비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등이 쟁점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당연히 어느 정도 있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2인 이상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8%, 소비는 2.7% 증가했다. 소득 증가는 이전소득 증가분 44만 원 덕분으로, 이전소득 증가분이 총소득 증가분 24만 원보다도 많았다. 소비 역시 재난지원금 효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소득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못했는데, 그 결과 소득에서 지출을 뺀 저축(흑자액)이 16%나 증가했다. 모두에게 같은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소비 진작에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방증이라 하겠다.

정부의 고용지원 대책은 휴업·휴직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수당의 90%를 최장 180일까지 지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매출 급감 시 150만 원 지급), 최저임금인상 지원에서 확대된 일자리안정자금(영세사업장 대상으로 노동자 당 최대 18만 원 지원),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은 업종을 상대로 한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항공 여행 등 8개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완화, 각종 사회보험료 면제 등), 그리고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공공 일자리 55만 개) 등이 있다. 액수로 보면, 올해 7월 말까지 지출된 고용유지지원금이 1조 원으로 작년보다 이미 20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개시와 함께 1조3천억 원 가까이 지출되었다. 올 초 2조2천억 원 규모로 시작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천억 원이 증액됐다.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은 신청자의 80% 가까이 10인 미만

1) 한국은행,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대응 (2020.7.31일 현재)』

2) 한국은행, 『2020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

기업의 사업주와 종사자이다. 코로나19의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기업 부분의 고용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도의 문제점은 코로나19 경제침체 기간에 비해 지원 기간이 너무 짧거나 일회성이란 점이다. 당장 지난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가까스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던 중소기업들이 9월 이후 대책이 없다. 일회성 지급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수개월 간 이어질 특고, 자영업의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액수가 적다. 초토화 상태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60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으나, 2차 재확산을 고려하면 이런 땀질식 대책으로 고용유지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요컨대,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책은 그럭저럭 시행은 되고 있으나, 유동성 공급의 부작용에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인기 영합적 재정 지출로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 장기간의 고용위기를 단기적 일회성 대책으로 모면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 민주노총: 정규직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

고용위기와 관련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하는 주체는 제1노총의 자리에 있는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3월 즈음부터 해고금지 조치를 시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원포인트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핵심 이유도 해고금지가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고금지 요구는 실현 가능성 여부와 별개로 앞서 본 코로나19 고용위기의 성격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영역이 해고의 금지 유무로 고용여부가 결정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앞서 분석한 3~7월 고용위기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고위험군에 속한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체, 민간부문, 가동률 급락한 서비스업종, 공단의 영세제조업체인데, 이들은 평상시에도 평균근속이 2~4년으로 매우 짧았고, 해고와 이직이 잦은 고용 특성이 있었다. 더구나 노조 조직률도 대부분이 1% 미만에 불과한 업종이라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 이런 조건에서 코로나19로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실정이라, 대출과 고용지원금에 기대어 간신히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한계기업이 많다.

요컨대, 민주노총의 해고금지 요구는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노동 현장에서 효과가 그다지 없는 요구란 것이다. 한편, 해고금지 요구는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코로나19 위기가 상대적으로 덜한 곳에서는 효과가 있다.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높은 노조 조직률의 부문에서 해고금지는 고용안정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영역은 코로나19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부문이다.

표 > 코로나19 고용위기의 고위험군, 저위험군 특징

	고위험군	저위험군
업종 특성	5인 미만 사업체 민간부문 가동률 급락한 서비스업종 공단의 영세제조업체	300인 이상 대기업 공공부문 가동률 하락 대처 가능 기업 수출 대기업
고용 특성	평균근속 2~4년. 평상시에도 해고와 고용, 이직이 잦음.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도 많음. 1% 미만의 노조 조직률	평균근속 8~10년. 해고와 이직이 드물음. 자영업은 없고, 간접고용은 다수 존재. 30~60% 노조 조직률.
코로나 영향	매출급감으로 한계기업 속출. 대출, 고용지원금으로 버티는 중.	대기업 부도 없고, 공공은 영향 없음. 현금 확보 중심으로 장기 대응 중.
해고금지 영향	해고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사업 존속 여부 가 쟁점. 노조 없어 실질적 현장 적용 불가능.	해고 금지와 관련된 법 개정 또는 정 부 명령 시 고용안정 배가. 단체협약의 효력 배가.

4. 결론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 2차 확산이 시작됐다. 올해 초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받은 기업들에서 다시금 고통이 커질 것이다. 그런데 2월부터 반년 가까이 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이용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던 기업들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매출 회복을 노리던 기업들이 2차 파동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접으면, 고용을 유지할 이유도 사라져 버릴 수 있다. 사업 자체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업 또는 업종 전환을 선택하려 들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격차와 취약계층의 생존권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1차 파동의 피해는 자영업과 영세기업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고용 불안정 계층에 집중됐다. 반면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와 괜찮은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계층은 피해를 거의 입지 않거나, 심지어 이전보다 나아지기도 했다. 코로나 19 2차 파동은 1차 파동의 피해를 본 계층을 다시 타격할 것이다. 이미 '그로기' 상태인 경제적 취약계층은 더는 버틸 재간이 없다.

좀 더 잘 준비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020년 3~7월까지 고용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 봐야 한다. 당시 타격을 입은 곳에서 또다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3~7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없어진 취업자는 340만 명·월에 달한다. 매달 68만명 가까이 5개월간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코로나19 2차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면 이보다 많은 사람이 고용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고용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나타난다. 대기업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공보다는 민간에서, 서비스업에서도 항공, 여행, 오락, 숙박, 영화, 예술, 미용, 소매업 등 가동률이 10% 이상 하락하는 변화를 겪었던 업종에서, 공단의 전통적 영세 제조업체에서 위기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들 업종에 맞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책은 유동성 공급의 부작용에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인기 영합적 재정 지출로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장기간의 고용위기를 단기적 일회성 대책으로 모면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보완 대책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 민주노총의 경우 해고금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효성이 큰 것도 아니다. 요구의 변경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끝>



사회진보연대는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등 전 세계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 폭력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노동조합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역량 강화와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의 힘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전화 02-778-4001, 4002

팩스 02-778-4006

메일 pssp4001@gmail.com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9길 14-1 거산빌딩 3층 [우 03984]